

최종 AI 진성검사 판정은 중앙정부에서

- 외국의 사례에서 보듯 혼란 방지 위해 -



위생방역대책위원회가 지난 11월 6일 본회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김선중 위원장을 비롯한 9명의 위원들이 참석하여 최근 중요시되는 질병 현안들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가졌다. 본고에서는 이날 위생방역대책위원회에서 다루어졌던 주요 내용들을 토대로 정리하였다. - 홍보팀 -

□ 최근 양계질병현황 대처 및 논의

제1현안 논의에 앞서 전국양계인 대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농장에서 다발하는 질병으로 대장균증(28.8%), IB(19%), 저병원성AI(14.7%), 가금티푸스(9.8%), IBD(9.2%), ND(7.9%), 뉴모바이러스

스(7.9%) 순으로 나타났다.

위원들은 실제 현장에서 다발하고 있는 질병으로는 대장균증, 괴사성장염, 뉴모바이러스 등을 거론하였으며 최근에는 복합적인 질병감염이 많아지는 경향을 보이면서 정확한 진단과 정부로의 보고체계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이와 함께 다수의 질병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항생제 처방이 어려워지면서 질병대처를 위해서는 국내외적으로 개발은 되어 있지만 아직까지 사용되지 않고 있는 백신에 대해 신속하게 도입하여 농장에서의 질병피해를 줄여나가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한편 국내 백신 도입 시 외국의 백신사용 동향 여부 등의 파악이 선행된 후에 국내 도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대두되었다.

이외에도 질병원인 규명시 병원체 위주의 진단으로만 치우치지 않고 환경적 조건, 계사상태 등에 대한 균형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차후 HACCP 도입과 관련 살모넬라와 항생제 규제로 인한 농가의 피해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대안들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함을

개진했다.

□ HPAI 예방을 위한 논의

제2현안 HPAI 예방대책에서는 살처분 범위 축소, 최종 AI 진성기관 확대, 차단방역 대책, 소독제 라벨 표시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지난 '06/'07년 HPAI 발생으로 추가발생 예방을 위해 3km 살처분 범위가 확대된 경우가 많아 인력확보, 비용발생 등의 문제점들이 도출되면서 살처분 범위를 발생지역 500m내로 축소하되 차단방역을 강화하자는 의견이 재차 언급되었으며 이에 최근 개정된 긴급행동지침(SOP)에서는 이와 같은 의견이 수렴되어 살처분 범위가 발생지역 500m내로 축소되고 차단방역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검역원 관계자가 밝혔다.

한편 농가에서 HPAI 최종 진성판정 시 이동에 따른 오염 가능성을 우려하며 국립수의과학 검역원에서만이 아닌 최소 군단위위에 검사시설을 갖출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나, 외국의 경우



▲ 좌부터 풍한농장 한희 대표, 네오바이오 유종철 대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노정승 팀장, 농림부 가축방역과 김용상 사무관, 검역원 방역과 이오수 과장, 검역원 조류질병과 권준현과장, 건국대 수의과 대학 송창선 교수, 본회 이연중 부회장, 남덕에스피에프 오경록 대표

에도 최종 진성판정은 최고 검증기관에서만 실시하고 있으며 최종 HPAI 진성판정은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이 혼란을 방지하고 효율적이라는 의견을 전했다.

올해 HPAI 예방을 위해서 정부에서는 차단방역을 위한 홍보과 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하며 다양한 방법들을 동원하여 차단방역을 실시하고 있다는 설명과 함께 차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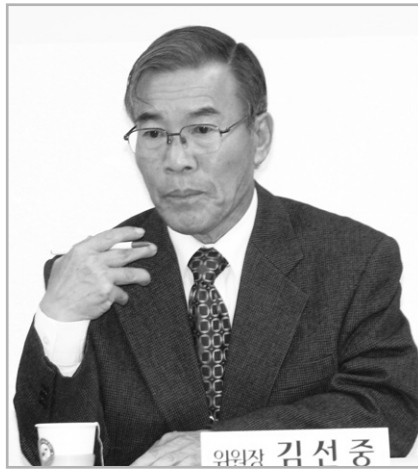
방역의 중심은 농가에 있음을 강조했다. 한편 AI 철새가 유입원으로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철새도래지에 대한 조사 실시와 함께 수확기에 따른 쌓아둔 볏짚과 인접한 양계농장의 주의가 필요함을 지적했다.

이밖에도 산성·알카리성·계면활성제 등 다양한 유형의 소독약으로 인한 농가들의 혼란을 예방하고 효율적인 소독실시를 위해 소독약에 색으로 구분된 라벨을 표시하여 농가들이 쉽게 구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견해와 함께 동물약품업체를 중심으로 시행에 옮길 수 있도록 계도가 필요함을 전했다.

□ 양계산물 안정성 확보 방안

제3현안 논의에서는 양계산물 안전성 확보와 관련 이번 유해사료 범위 축소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위원회에서는 소비자가 안전축산물을 요구하고 있으며 생산자들이 소비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안전 축산물을 생산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



▲ 위생방역대책위원회 김선중 위원장

성하였다. 그러나 농가측에서는 배합사료에 들어가는 항생제의 축소에 따라 농장에서의 자가처방이 증가하여 오히려 항생제 오·남용을 부추일수 있다는 우려감을 내비쳤다. 이에 농림부 관계자는 유해사료 축소와 관련 내성율이 90%이상이며 약효 효과와 그 사용량이 미미한 것으로 인체에 공통되는 항생제를 위주로 축소해 나갈

것이라는 설명이 있었다.

한편 친환경 인증제도와 관련 올해 3월 모든 농축산물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만 친환경 인증기관을 허가하게 법제화된 이후 특정분야 전문 친환경 인증업체들의 인증업무에 차질을 빚으며 양계산업에서도 이 같은 사례가 있어 산업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HACCP, 무항생제 인증, 등급제 등 여러 인증제도들이 정부주도하에 실시되고는 있으나, 많은 인증제 실시로 인한 혼란 야기와 비용을 들여 실시하였지만 실수요자가 되어야 하는 농가들의 이익은 극미하며 유통에서만 실효를 얻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위원회에서는 친환경 축산과 관련 전문가들의 모여 양계업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밖에도 정부에서는 위생방역차원에서 앞으로 백세미 관리 종합대책으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을 밝혀 앞으로 백세미 관리의 개선 여부에 기대를 모았다. **양계**